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3.6.(목) 14:00	배포	2025.3.6.(목)	
담당부서	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	책임자	국 장	송경용 (02-3145-8410)
		담당자	팀 장	신동호 (02-3145-8412)

**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
대부업권·채권추심업권 대상 「업무 설명회」를 개최합니다.**

〈주요 내용〉

-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「대부업법」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대표 법령이 금융 현장에서 **성공적으로 안착**될 수 있도록
 - 금감원은 대부업권, 채권추심업권 대상으로 **별도 설명회를 개최**하여 제·개정 법령 주요내용, 법령 위반소지 사항 등 유의사항을 전파하였음
- 금번 설명회를 통해 양 업권에 법 시행에 대비한 **철저한 사전준비**와 **불법 영업 소지 예방**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독려하는 한편,
 - 서민밀착형 금융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 등 **취약 차주 보호**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
설명회 실시 개요

주요내용	개정 「대부업법」,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전파
일 시	2025.3.6.(목) 14:00~17:10
장 소	금감원 2층 대강당
참석자	대부업자·채권추심회사, 대부금융협회, 신용정보협회 관계자 총 250명

1 인사말(부원장보) 요지

- 김성욱 부원장보는 「대부업법」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시행('25.7월)될 예정이며,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은 이미 시행('24.10월)되어 '25.4.16.까지 제도기간 중임을 설명하고,
 - 고금리,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취약 차주 보호, 대부업 신뢰도 제고 등 최근 제·개정된 兩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였음
- 아울러, 최근 지자체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(GA) 연계 폰지사기 연루 의혹 등 금융사고 발생 사례를 언급하면서,
 - 향후 금감원은 국민적 눈높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히고, 각 업권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음

2 설명회 주요 내용

- **(세션Ⅰ 대부업법)**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불법사금융 척결 등을 위해 전면 개편된 대부업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
 -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*,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(지자체→금융위),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및 대표자 등의 타 업체 겸직 제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,
 - * 개인의 경우 1억원,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 -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*되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되며, 반사회적 대부계약(초고금리 계약** 포함)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
 - * (현행) 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정) 10년이하 징역, 5억원 이하 벌금
 - **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
 - 아울러, 그간 대부업법 위반 주요 지적사례를 설명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및 준법의식 제고를 당부하였음

- **(세션Ⅱ개인채무자보호법)** 개인채무자 상환·독촉 부담 완화 등 동 법 취지가 제도기간 중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법령 주요 내용*을 설명하고 최근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,

* 추심총량제(7일 7회), 추심유예 요청권(사고, 질병 등 발생시),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

- 작년 현장점검시 적출된 내부통제 미흡 빈발사례* 및 채권추심회사 내부 기준 모범운영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양 업권의 추심업무 관행 개선을 유도하였으며, 제도기간 종료 전 법 이행상황 점검 예정임을 안내하였음

* (예시) ❶ 이자 산정 로직 미변경, ❷ 채무자 안내 일부 누락, ❸ 추심총량 관리 미흡 등

설명회 세부 일정

구 분	내 용	비 고
세션Ⅰ (대부업법)	■ 인사말	부원장보
	■ 「대부업법」 개정 내용 및 유의 사항	금감원 (서민금융보호국)
	■ 주요 검사 지적사례(대부업자)	금감원 (서민금융보호국)
세션Ⅱ (개인채무자보호법)	■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주요 내용 및 최근 이슈	대부금융협회
	■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 모범사례	신용정보협회
	■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이행 관련 유의사항	금감원 (서민금융보호국)

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권·채권추심업권 준법의식이 제고되고,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 업무관행 개선을 기대
- 동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,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업계 소통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
- 아울러, 불법추심 행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- ① **(대부업 등록요건 강화)** 영세업체 난립 및 불법영업에 따른 대부 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강화
 - 자기자본 요건 상향(지자체 대부업자) 및 신설(대부중개업자)*, 자기 자본 유지의무(지자체+금융위 업체) 도입
 - * (지자체 대부업자) (法) 1천만원 이상 → **1억원 이상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 (대부중개업자) <대부중개사이트> (法) 자본요건 없음 → **1억원 이상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 <그 외> (法) 자본요건 없음 → **3천만원 이상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- ② **(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)**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가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 - ①등록기관 상향(지자체→금융위), ②인력·전산설비 등록요건 추가, ③수집한 개인정보의 대부중개 外 목적 처리시 처벌 근거 신설
- ③ **(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)** 현저히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대부 이용자 구제를 위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·이자 무효 근거 마련
 - 성착취 추심 연계 또는 인신매매·신체상해, 폭행·협박 등을 원인으로 하는 대부계약(초고금리* 계약 포함) 등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포함
 - * 법상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
- ④ **(처벌 강화)**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·제재수준을 대폭 상향*하여 불법사금융 진입 유인을 차단
 - * (미등록 대부업) 징역 5년, 벌금 5천만원 → 징역 10년, 벌금 5억원
 (최고금리 위반) 징역 3년, 벌금 3천만원 → 징역 5년, 벌금 2억원
 (정부·금융기관 사칭광고) 과태료(5천만원 이하) → 징역 5년, 벌금 2억원
 -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고,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 수준으로 처벌

① **(사적 채무조정 활성화)** 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'채무조정요청권' 부여(원금 3천만원 미만)

-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, 10영업일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*

*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, 거절 이후 변제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 가능

-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, 채권 양도, 주택경매 진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미리 채무조정 기회 통지

② **(연체·추심부담 경감)** 대출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금지*(원금 5천만원 미만)

※ [예시] 대출원금(잔액) 100 =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+ 미도래원금 90

(현행) 100 x (약정이자+연체가산이자) 부과 →

(개선) [10 x (약정이자+연체가산이자)] + [90 x 약정이자] 부과

-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등
- 추심·양도금지 채권* 규정 명문화, 추심방식 제한**(추심 예정통지의무, 추심총량제, 추심유예제,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)

* 소송 진행중 채권, 채무조정 진행중 채권, 원인서류 부재채권 등

** 7일 7회 초과 추심연락 금지,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등

③ **(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)** 채권금융회사의 수탁 채권추심회사(추심위탁시)·채권양수인(채권양도시) 선정시 채무자의 보호 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

-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회사 지도·감독책임* 부과, 채권추심회사법 위반 시 채권금융회사도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

*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금융위 보고 필요